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

일시: 2017년 6월 13일 저녁 7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주최: 노건투, 노동당 노동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목차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좌파들의 과제 _ 김하영(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3

문재인 정부 재벌-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_ 백종성(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 10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대응 방향(2016. 6. 13.) _ 노동전선 ... 22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노동자운동의 과제 _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 29

문재인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2017.6.13) _ 정진우(노동당 노동위원장) ... 34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좌파들의 과제

김하영(노동자연대 운영위원)

1.

문재인 정부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등장했다. 세계 자본주의는 그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깊은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불황이 10년째 지속되면서 정치 양극화도 더욱 심화했다. 상이한 정치·사회세력들이 각각 그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대결해 온 결과다. 특히, 이집트 혁명, 시리아의 집권, 브렉시트, 트럼프의 등장, 르펜의 약진 등이 그 사례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와 정치 위기의 영향을 긴밀하게 받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세계 경제 위기 초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더는 이런 행운을 누리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세계경제 침체가 지정학적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어 동아시아 정세는 불안정을 더해 왔다.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국내 정치의 갈등과 분열은 이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들에 직면해 박근혜 정부가 취한 정책들은 대중의 광범한 불만을 일으켰다. 한·미·일 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가 그렇고, 노동자들에게 경제 침체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노동개혁을 추진한 것도 박근혜에게 부메랑이 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공격했다. 이것은 장기 경제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임금 삭감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문재인은 이 같은 광범한 불만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그의 어정쩡한 중도 개혁은 누적된 불만을 해소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6월 3일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 안보 합의들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의 지속 전망은 문재인이 자신을 지지한 다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배신할 것임을 예고한다. 문재인은 개혁을 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성 높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재인은 “사람 중심 경제”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속빈 강정인 이 경제 비전은 ‘공정과 혁신, 통합의 길’이 부제로, 기업 활동과 정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한다. 완전히 비현실적인 공상이다. 같은 모토 아래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이 ‘노동 연계 복지’였다. 이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유급 고용되는 것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라는 발상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떠밀리는 한 결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다.

‘사람이 중심’이라거나 ‘사람이 희망’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의 속을 들여다 보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쥐어짜야 한다’는 냉혹한 정책들로 이뤄져 있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에 유시민은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다. “계속 잘 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하고 ...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 개개인이 유능해야[한다.]” 이런 목적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정년 연장, 연금 개악, 임금 피크제, 경쟁 교육 강화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입안자들이 재벌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 이미지를 불려일으키기도 한다.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해 특혜를 누리며 엄청난 부를 축재해 온 것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요란한 빈수레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 축적은 법칙이기 때문이다. 설사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력 집중 완화가 일시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김대중 정부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양보를 받아냈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재벌의 영향력은 더 막대해졌다.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오히려 재벌개혁론은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진정한) 문제라면서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압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수년 전부터 바로 이런 논리를 펴 왔다. 노동자에 대한 대기업의 분배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데도 장하성은 대기업의 노동분배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이전하는” 양보를 제안한다.

장하성은 그의 저서들에서 복지 예산 확대가 현실성이 없다고 늘어놓은 뒤,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반대하고 “임금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소득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비할 바 없이 큰 상황에서 임금 불평등을 강조하는 것을 뻔한 목적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시선을 임금 격차 쪽으로 유인함으로써, 불평등 완화의 재원을 자본가 계급에 요구하지 않고 노동자들끼리 나누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은 2013년에 낸 저서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일자리위원회를 제안한 장본인이다. 그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한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재교육·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높은 유연성, 소득의 안정성을 조합하는 것이 “황금 삼각형 모델”이라고 한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황금 모델이 아니다. 이 네덜란드 모델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유연안정성”을 보장하는 좋은 모델인 것처럼 처음 소개됐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고용률 70퍼센트와 노동개혁의 전거로 삼으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네덜란드 모델의 본질을 잘 알게 됐다. 그런데도 일자리위원회는 다시금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꺼내들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1982년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며 이 양보를 수용하고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결과는 시간제 일자리 폭증과 저임금 노동자 증가, 그리고 여성 빈곤 확대였다.

위에서 논의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문제인 정부가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바람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기는커녕 장기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 내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삼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3.

장기 경제침체와 문제인 정부 등장이라는 조건이 노동자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려면 여러 요인들을 따져 봐야 한다. 경제 위기는 분노를 낳지만 자동으로 계급투쟁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경기의 일시적 반등, 정치적 요인들, 노동계급의 상태, 중재 기능을 하는 정치·사회 구조 등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대규모 운동의 결과로 등장했다. 여기서 (특히 의회 탄핵 이전인 전반부에) 노동자 계급이 한 구실은 적잖았다. 우선, 그 투쟁의 사회적 구성에서 노동계급의 비중이 컸다.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직 노동자들이 퇴진 운동 초기에 견인차 구실을 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쉽게도,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가 제출되고 노동자들 고유의 투쟁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촛불운동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노동자들은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승리를 맛봤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저항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물론 우파 정부 하의 지난 9년이 악몽 같았던 나머지 새 정부 임기 초인 지금 노동자들은 문제인에 대

한 약간의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투쟁에 기대어 집권한 정부가 자신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투쟁 가능성의 현실화와 전개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정치적 개혁주의자들의 중재 기능이다.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노동조합 관료층(지도자들)은 지배계급을 위한 충격 흡수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때 그들은 노동자 투쟁을 어느 수준으로 자제시키거나 통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불필요하게 타협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 참가를 결정하고, 6.30 파업을 “비정규직 사업장 파업”으로 축소한 것은 이런 우려가 실질적임을 보여 준다. 노동운동 일각과 진보진영에서는 ‘새 정부를 투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인의 ‘개혁’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종속시키려 한다면 경제 침체 시기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후반부처럼) 노동자들을 불필요한 희생과 사기 저하로 내몰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상당한 정치적 불안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유력한 정규직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자회사 방안을 살펴보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추정’을 살펴보면 문재인이 노동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이 미적거리고 있는 노동시간 행정 폐기 문제, 전교조 인정 문제, 성과연봉제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 하면 그에 대한 반감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좌파들은 위에서 논의된 조건들이 만들어 내는 모순들과 기회들을 활용해, 기층의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4.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떠한 착각과 환상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괜한 기대와 착각은 노동자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좌파들은 온건 진보진영의 대세 몰이 때문에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책의 숨겨진 본질을 들춰냄으로써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울 필요를 깨닫고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대규모 운동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해서 대중의 염원을 수용할 것이라고 (온건 진보진영처럼) 보는 것은 순진한 전망이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중립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자본주의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부르주아적 개혁이고, 이는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에 부담이 덜한 약간의 개혁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것은 곧 노동자들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좌파들은 이런 쓰디쓴 진실을 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행동에 나설 능력을 키우도록 고무해야 한다. 이와 달리, 정권 초반의 개혁 드라이브를 활용하자며 일시적·부분적 협력을 제공한다면, 노동자 운동의 수동화와, 자주성 억제 효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경제 위기 시기에 심화될 수 있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반목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 투쟁이 ‘계급 대 계급’의 정치적 양극화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려 한다. 좌파들은 상이한 노동자 부분들을 이간시키는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 여기서는 세 측면을 살펴보려 한다.

1) 정규직 양보론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은 처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삼아 처지가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과는 달리 실제 목적은 경제 불황에 직면한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에는 그럭저럭 보호받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공격이 성공을 거두면 비정규직의 처지도 더 열악해진다는 것이 국제적 경험이다.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미 공격받고 있다. 2016년 근로손실일수는 199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급 반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불만 등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 내에는 정규직 양보론이 점점 확대돼 왔다.

좌파들은 올바르게도 정규직 양보론을 반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규직 양보를 반대하면서도, 공격받기 시작한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 투쟁을 고무하는 데는 큰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투쟁이 계급의 단결을 저해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간질을 물리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강력한 조직력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조건을 지키는 동시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최저임금 같은)만을 가지고 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수 활동가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대중 투쟁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자 대중은 이런 투쟁 속에서만 의식이 발전할 수 있다. 만일 좌파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요구’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소한 경제 투쟁을 단순히 대립시키기만 하면,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런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투쟁을 흐지부지하고 불필요한 타협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망을 강화하고 양보론이 확산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좌파 내부에서 공무원연금 양보나 ‘나눔과 연대’(금속 노조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에 긍정적 반응이 나왔던 것은 이런 약점을 얼핏 보여 준다.

좌파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기층에서 건설하는 지난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아차지부의 노조 분리 문제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현장의 의견 분포를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분리주의 페미니즘과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점점 많이 진출하는 오늘날 좌파들에게 여성차별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과 승진 등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육아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에 노출돼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천대받는 현실에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여성 운동 가운데는 성폭력 문제에 거의 배타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남성들을 잠재적 성폭력범으로 보는 분리주의 경향이 상당한 영향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 경향은 노동운동과 혁명적 좌파에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남성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잠재적 성폭력범 또는 의식이 낮은 성차별적 아재 취급을 한다. 이런 태도는 여성을 노동계급과 대립시키고 노동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낸다.(여성차별주의자들이 우글대는 운동을 어떤 여성이 좋아하겠는가?) 심지어 노동단체 내에서 여성문제 토론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마저 낳고 있다(‘찍히면 죽는다’는 두려움에서 입을 다물어서).

좌파들이 분리주의를 추수하거나 그 위험을 모르는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좌파들은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여성해방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3·8 국제여성의 날이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고자)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클라라 제트킨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 낙태권 운동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운동이 노동계급 운동의 일부로 전개된 사실은 이런 전통을 잘 보여 준다.

3) 이주노동자 배척 반대와 인종을 넘어선 연대

일자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우파 언론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

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말로 우려할 일은 민주노총 산하 일부 조직이 출입국관리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협조하거나 이주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는 일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용과 노동조건이 악화하면 이런 일은 더 빈번히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좌파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말이다.

좌파들은 ‘체제의 희생자를 비난하지 말고 체제를 비난하라’고 내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운동 안팎으로 개혁주의의 영향력이 증대할 수 있다. 좌파는 개혁주의자들과 그들이 노동계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처할 전술들이 필요하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노동자 대중을 좌파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 혁명적 좌파는 코민테른이 발전 시켰던 공동전선 전술을 적용해야 한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단지 폭로하고 그 지지자들에게 ‘당신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 제 갈 길 가자’고 선을 긋는 것은 어떤 결실도 거둘 수 없는 접근법이다. 개혁주의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구체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개혁주의자들과 대중적 공동 행동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물론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문제이니까 말이다.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공동 투쟁을 구축해 좌파들이 개혁주의 지도자들보다 더 효과적인 투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층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키고 노동운동 내 좌파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좌파들 사이의 토론과 협력을 증진시켜 나아가기를 바란다.

〈더 읽을거리〉

최일봉,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노동자연대〉 209호(2017. 5. 23)

최일봉,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노동자연대〉 201호(2017. 3. 21)

김하영, ‘경기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노동자연대〉 209호(2017. 5. 23)

김하영,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노동자연대〉 198호(2017. 2. 24)

문재인 정부 재벌-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백종성(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1. 재벌 정책

〈경제민주화〉 공약 중 주요항목

불공정 거래	△범정부차원 을지로 위원회구성, △중소기업단체 교섭력 강화, △납품단가 공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항제경영, 지배구조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전자투표·서명투표제,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사면권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요건 강화, △기존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강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과 행사 제한, △노동이사제
경영 세습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 사각지대 악용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차단 방안마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 모범기준) 도입, △불법·편법 지배·세습 방지를 위한 주주권 적극행사,
재벌 과세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상향,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 문재인 최종공약집에서 항목 재구성

1) 시장주의 재벌대책 - 총수일가에 대한 소액주주 견제 장치 구축

- 정치권력과 대자본의 공모 - 즉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만큼, 재벌 문제는 중요 관심사. 문재인은 선거 시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 경영 확립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은 바 있으며 또한 위에서 보이듯, 지배구조 문제는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현재 국회에는 위 방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음.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열람권 도입 ·대표소송제도 개선	- 모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손자회사 부실경영에 대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
·전자투표 ·서명투표제	- 주주가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투표를 가능케 함.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 이사 선출시마다 1주 1표가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감사위원과 일반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현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은 이사 한 사람씩을 1주 1표

	의 의결권에 근거해 선출. 즉, 단순투표제로 할 경우 모든 이사를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음)
--	--

- 위 방안들은 총수 지배에 대한 시장주의·주주자본주의적 견제 방안이며, 그 주체는 주주. 새 정부 재벌 대책의 기초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있으며 총수일가 독재와 재벌 독과점이 왜곡해온 자원배분 기능을 시장질서와 주주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 논지 핵심. 즉, 민주당의 재벌 체제에 대한 입장은 재벌 총수일가의 독재적 사업결정이 시장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막는다는 것. 재벌이 총수일가 지배에서 벗어나 전문기업화하고, 건실한 이윤창출 활동에 집중할 경우 주가상승과 늘어난 배당으로 주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 재벌 총수일가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정부의 재벌 대책은 총수일가의 권력을 억누르는 한편, 그 권력을 시장으로 이양하고자 함. 그러나 재벌의 지배 주체를 총수일가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하며 그 적나라한 예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뽑히는 KT.

- 정부가 KT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기 1년 전인 2001년, KT 직원은 4만4094명.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31일 KT가 고용한 인원은 총 2만3575명에 불과. 유형자산은 해당 기간 17조 1400억 원에서 14조3121억 원으로 감소. 민영화 이후 지난 15년간 KT는 가혹한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생산적 투자를 줄여가며 수탈적 이윤을 축적해왔다는 것. 시장이 모범적 지배구조를 가졌다고 평가하는 KT는 연간 수십 명 노동자가 사망하고 십수명 노동자가 자살하는 노동지옥.

- 더군다나 재벌은 이미 충분히 ‘시장적’ 존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30대 재벌 평균부채비율은 519%에 달했지만 2016년 현재 77.9%에 불과. 곧, IMF 구제금융 이후 이들은 시장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에 역행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만을 고르고 있으며 최근 5년을 따져도 30대 재벌 부채비율은 2012년 97.9% → 2016년 77.9%로 감소. 이런 조건에서 계열사 하나의 실패가 순환출자와 지급보증의 고리를 타고 그룹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은 발생하기 힘들며, 시장주의 재벌개혁론을 대표하는 김상조¹⁾가 소액주주운동 시절 견지했던 재벌해체론과 달리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음. ‘시장’이라는 대안은 결국 친 재벌정책의 다른 말.

2) 스튜어드십코드, 연기금 동원 금융시장 부양

- 새 정부 연기금 통제 방안 역시 주주자본주의의 구축과 연동.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는 5월 9일 “재벌이라고 불리는, 가족경영 거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내걸어온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시장심리를 부양해 해외 투자자의 환호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 지난 4월 노무라증권은 “5월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코스피가 300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권리가 강화되고, 기업들이 현재 20% 수준인 배당 성향을 일본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린다면 한국 증시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이야기.

-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민연금 활동지침, 스튜어드십코드 역시 마찬가지. 연기금을 바탕으로 대기업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재벌 일상 경영은 정부가 밝힌 통제 범위에 들어있지도 않으며, 현

1) 그는 홍석현이 주도하는 ‘리셋코리아’의 기업지배 분과장이었다.

재 스튜어드십코드의 맥락은 연기금을 주주 자본주의 기준에 따라 금융시장의 적극적 행위자로 재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금융자본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배당 확대와 주주이익 극대화.²⁾ 그 귀결은 생산적 투자 축소와 배당 확대일 뿐. 스튜어드십코드에 근거한 연기금의 시장참여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최근 경제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³⁾

■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 ◆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 ◆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 ◆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

- 어떤 금융자본도 일자리의 확대를, 비정규직의 철폐를 반기지 않음. 중요한 문제는 주주, 곧 금융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벌체제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노동자 민중 주도로 통제하는 것.
- 이런 점에서 연기금 통제의 노동자·민중적 기준에 대한 이슈화가 필요.

3) 자사주를 활용 지주사 전환과 경영세습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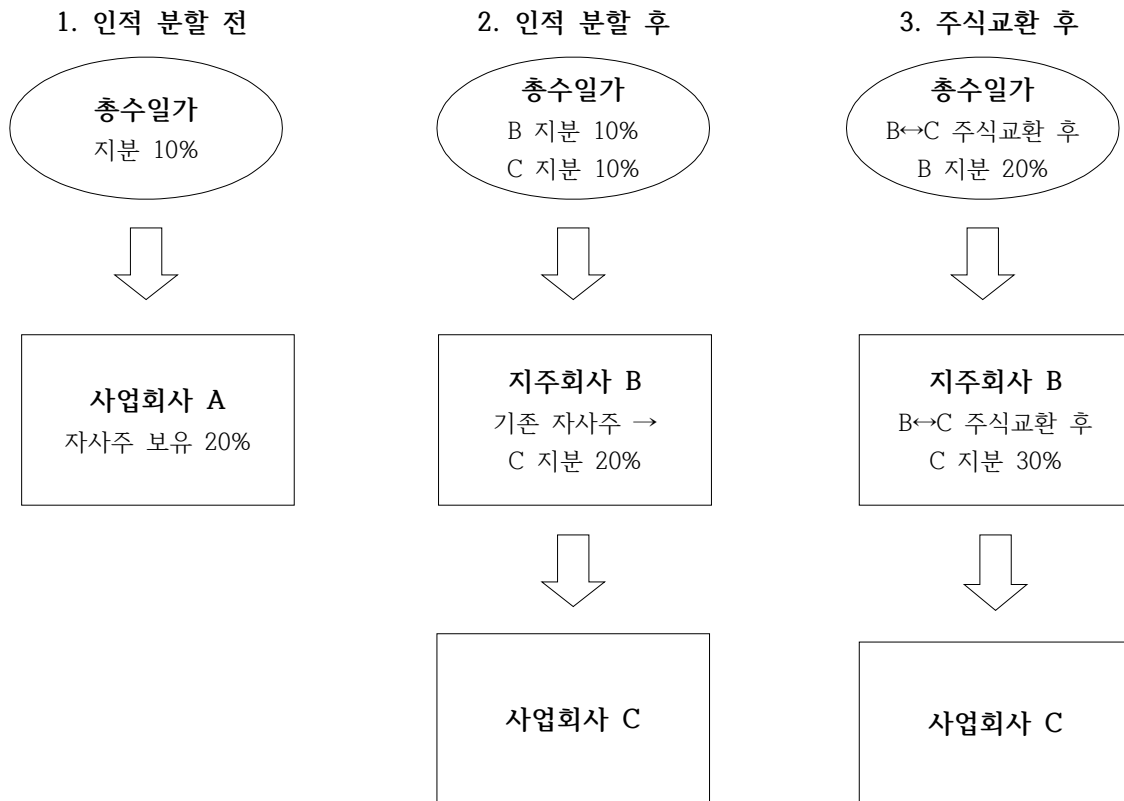
- 재벌의 지배구조는 취약. 10대 재벌 평균 3%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자산규모 수백조원의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권력과의 공모가 필요하며, 이는 재벌 범죄의 핵심원인. 재벌이 그대로 지분을 상속하고, 상속 지분에 대한 50%의 세금을 부담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순환출자의 고리가 흔들림. 즉, 재벌의 승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분 상속자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막대한 현금을 확보했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려받은 지분 일부를 매각해도 계열사 지배에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한 지분을 물려받은 상황을 뜻함. 이를 위해서는 상속 절차 이전에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획기적으로 늘려 놓아야 함.
- 이런 조건에서, 그간 재벌이 3세 승계에 애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회사의 자사주 취득 확대, 둘째,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회사 분할을 통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셋째, 분할된

2) 재벌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침에 대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은 정 반대를 향하고 있다. 물론, 재벌도 이를 잘 알고 있다.

3) “일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듬해인 2015년 닛케이지수가 15년 만에 2만 선을 뚫었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30%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주 배당도 계속 늘어나 지난해 일본 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은 11조8000억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8/2017050802087.html

사업회사-지주회사 사이 주식교환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지배력 강화가 그것임.

-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10%, 분할 전 자사주 보유 비중이 20%인 한 기업의 예를 들어보자(단순화를 위해 분할 비는 1:1로 가정,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은 사업회사 지분 20% 보유).



- 위 도표 예에서 보이듯 총수일가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전환, 그리고 지주회사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지배력을 두 배로 확장. 이것이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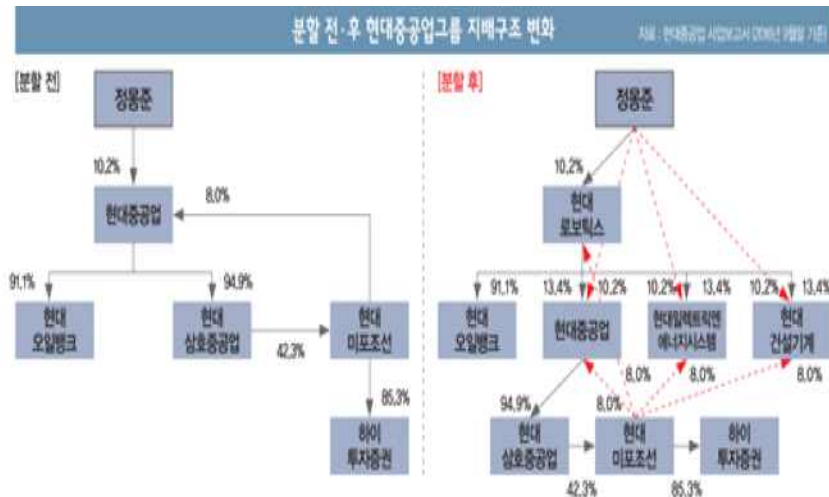
- 예를 들어, 한진그룹은 2013년 대한항공(A)을 지주회사(B)인 한진칼, 그리고 사업회사(C)인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 6.75%를 지주회사인 한진칼로 넘겼고, 한진칼은 해당 자사주만큼 대한항공(C) 신주를 배정받음. 의결권이 없던 자기주식은 인적분할과 전환을 통해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배력으로 탈바꿈했고, 조양호와 그 자녀들은 위에 서술한 인적분할 이후 주식교환을 거쳐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지분 25.27%를 확보.

- 최근 노동조합 반대를 누르고 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을 의결한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현대중공업은 올해 2월 27일 주총을 열어 분사(기업 인적분할)를 결정.⁴⁾ 현대중공업은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조선·해양·엔진부문만 남기고, 전기·전자(현대 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건설장비(현대건설기계), 로봇(현대로보틱스) 등 3개 사업부를 떼어

4) 기존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의 순환출자 구조

별도 법인으로 나누는 사업분할을 의결.

- 이에 따라 신설 지주회사는 기존 현대중공업 자사주 비율(현대중공업 자사주 13.4%)만큼 신주를 배정받았고, 정몽준은 상술한 주식교환을 거쳐 현대로보틱스 지분 43%를 확보해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서 <정몽준-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에 이르는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형성. 향후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정기선⁵⁾으로서의 3세 승계가 가능해진 것.



- 이렇듯 재벌체제는 국가의 자원을 흡수해 만들어진 이윤이라는 ‘공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이를 ‘3세 승계’라는 발판으로 삼아옴. 막대한 자사주를 사들여 보유하던 삼성이 이재용 구속 이후 지주사 전환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이유 역시, 재벌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 상법개정안 통과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⁶⁾ 지주사 전환 잠정 포기를 발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경영승계 의도가 없음을 천명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데 있음.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전환과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 가로막혔을 경우,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친화책을 명분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전체 주식 중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것. 물론 이는 지주사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대주주에게 유리함.

- 재벌들이 ‘투기자본의 영향력 강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위방인이 실제 재벌을 규제하기 때문. 재벌들이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명분은 다음.

구분	개정안 내용	우려사항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소액주주 권리강화 대신 외국계 투기자본 영향력만 강화 가능성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선출시 1주 1표가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자본 다수결 원칙 위배,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 위험
전자투표제 의무화	주주가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고	해킹, 악성루머 등에 의해주

5) 정기선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617주에 불과.

6)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이 아니었다면 상법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인터넷으로 찬반투표 가능	주의사 왜곡 가능성
자사주 처분 제한	인적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	지주사 전환 어려워짐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부실경영에 대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자회사 주주 권리 침해,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 훼손
특정 사외이사 선임강제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사외이사로 의무선임	주주재산권 침해, 장기적 관점의 사업결정 추진 어려움

* 대한상의,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제언」 중

- 상법개정안중 특히 기업분할을 활용한 자사주 의결권 부활 금지는, 많은 재벌에서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벌은 거세게 반발할 것. 현재 재벌이 기존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구조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은 3세 승계이며, 재벌은 지주사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상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음.
- 이런 조건 속에서 장하성-김상조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의 재벌대책은 주주자본주의적 개혁조차 온전히 밀고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 주주자본주의-시장주의자들은 계열사 하나의 부실이 전 계열로 확산할 수 있는 순환출자에 비해 지주회사가 나온 지배구조라고 규정함. 그러나 지주회사는 1986년 경제력 집중을 가속한다는 이유로 금지된 이후, 1999년 IMF 구제금융 국면에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구조조정이 용이함을 이유로 다시 허용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상승함.
- 이런 지점에서 새 정부 재벌정책은 자신의 기조 안에서조차 일관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핵심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 김상조 등 재벌개혁론자들이 과거 자신의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IMF 구제금융이 강제한 자본의 진화라는 현실 그 자체에서 기인할 것. 곧, 재벌대책이 '시장'에 맞추어지는 한 그 대책의 한계는 필연적.
- 상법개정안이 명시한 인적분할 시 분할 지주회사에 자사주를 활용한 신주배정 금지, 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방침은 이윤(공금)을 활용한 총수일가 경영 세습을 규제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나 법 개정 가능성에 대비한 지주사 전환 급증 추세에서 드러나듯 실제로 경영세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 그 자체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막대한 자사주(=이윤)를 소각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주주'라는 논리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충족하는 것은 결코 아님.

2. 노동·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 공약 중 주요항목

고용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청년고용의무 할당 현행 3%에서 5%로 확대
노동시간	△주 상한 52시간 준수 △임기 중 매년 80시간 단축으로 연간 1,800시간 실현 △칼퇴근법
비정규직	△정부·지자체 상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전환

	지원 월 100만원으로 확대, △비정규직 상한비율 초과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보장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 분야 등에 대해 공동사용자책임 법제화 △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임금	△2020년까지 최임1만원,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동단가 적용, 공공발주 시중노동단가 적용 방안마련, △체당금제도 확대,
노동존중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 모범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알바존중법
노동권	△ 결사, 단결, 단체교섭권 보호 ILO협약비준 및 국내법 개정, △특수고용, 실직구직자 노동기본권 보장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개선방안마련, △초기업단위단체교섭 촉진, 산업별 노사정대화 적극지원 △ 단협적용범위 확대 및 효력 확장제도 정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손배가압류제한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중단
노사정 대화	△ 노동회의소를 통한 미조직 노동자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 정책연구, △종업원대표제도 실질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추진
경영참여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입 및 민간확산
노동안전	△위험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하청, 특수고용 등 원청사업주 영향권 내 노동자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적용 △위험업무 사내하도급 금지, △중대재해 사업장 민형사 책임강화

* 문재인 최종공약집에서 재구성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

- 문재인이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세부 내용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
- 문재인 정부는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에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함,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7만개이고, 나머지는 공공부문 자회사 소속으로의 전환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
-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행선지, 인천공항에서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실상 역시 공약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와 자회사 소속 전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등장한 무기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비정규직. 임금과 복리후생의 모든 체계가 정규직과는 애초부터 다른 체계.
- 이미 존재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복지수준은 정규직의 절반 가량에 불과. 무기계약직은 차별금지 조항의 제약을 받지 않음. 곧, 무기계약직은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회사 소속도 정규직’이라는 논리는, 생산현장에 ‘불법파견’은 없으며 ‘합법도급’만 있다는 논리, 즉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원청 비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업체 정규직’이라는 불법파견 자본의 논리와 상통.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는 것일 뿐.

2) 일자리위원회를 축으로 광주형 일자리 확산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장한다는 노동정책 기조를 대선공약에서 밝혔음.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이 명시한바, 정부의 계획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 확산.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과 노조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업 내 기업, 곧 자회사 간접고용.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기본방향과 같으며, 그 확산의 도구가 바로 일자리위원회.
- 광주형 간접고용의 모델은 폭스바겐과 독일 금속노조의 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아우토5000.⁷⁾ 2001년 폭스바겐과 독일금속노조는 3교대, 28.8시간에서 42시간까지의 유연근무제, 폭스바겐 직영 노동자보다 20% 낮은 임금을 협약. 이 회사가 폭스바겐의 자회사 Auto5000.
- 자본과 노조의 협약으로 만들어진 간접고용 일자리는 폭스바겐 원청노동자와 무관해 보였으나, 2006년 폭스바겐 직영 노동자들은 결국 유연근무제 단협개약을 수용함. 구체적 내용은 1993년 이래 확보한 28.8 노동시간제 폐기와 추가 임금지급 없는 25-34 유연근무제 수용. 이는 독일 내 하르츠 개혁의 안착과 연동.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협약→사회협약 확산→해당 모델 안착으로 이루어지는 ‘중규직’의 일반화 과정,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는 대타협의 의도이자 귀결임. 광주시는 ‘한국 평균임금보다는 높고, 현행 완성차 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으로 광주형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기아차와 노조의 협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그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

7) 월 5천 마르크임금, 5천명 고용.

○ 기아차 노사관계 분석의 필요성과 연구의 지향

- 기아차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조명이 필요, 기존 발전의 성찰과 혁신 방향 하에서 새로운 공장(40만 대)이 위치함.
- 100만 대 프로젝트는 단지 생산량과 고용이 늘어나는 양적인 확대 전략이 아니라, 생산과 고용관계의 질적 전환, 고도화를 겨냥함.
- 광주공장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실험공장(pilot factory)에 대한 수혈기능을 해주어야 하며, 실험공장과 상호작용은 불가피함. 아울러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와 생산 방식의 역전파(reverse diffusion)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임.
- 이는 곧 기아차 노사관계 전환에 있어서 혁신적 접근(innovative approach)과 점진적 접근(incremental approach)의 병행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는 중국에 정규직 노동조건에 대한 강력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곧, 현 국면에서의 노사정 대타협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중국에는 정규직 자체를 줄임.

3) 문재인 정부 식 공단조직화 - 노동회의소

- 문재인 정부가 소위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는 것이 바로 위 맥락과 직결. 정부는 전국은 물론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를 의도하며 그 기초를 건설하고자 함.

“저는 새로운 노사민정 지역협력모델을 울산에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울산의 원청 및 하청업체 대표,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직 노조 등의 노동계대표 그리고 전문가 및 울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형 노사민정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정규직 전환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협력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모범을 만들어 냅시다.”⁸⁾

- 사회적 대화를 아래로부터 뒷받침 하는 것이 바로 노동회의소. 이는 관제 민간기관인데, 다음의 역할을 함. △미조직 노동자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 △정책연구. 문제는 ‘노동회의소’를 통한 미조직 노동자 관제 조직화가 야기하는 노동조합의 부차화. 이는 관제 민간기구의 허구적 대표성 획득에 동반하는 조직노동 공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큼. 또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개념에 근거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역에서 뒷받침할 ‘직업소개소’에 지나지 않게 될 공산이 높다.⁹⁾ 즉, 정권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를 주체화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이런 관제기구일 뿐.

- 이렇듯, 안정적 이윤추적과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 ‘노사정 대타협’의 물적 조건이라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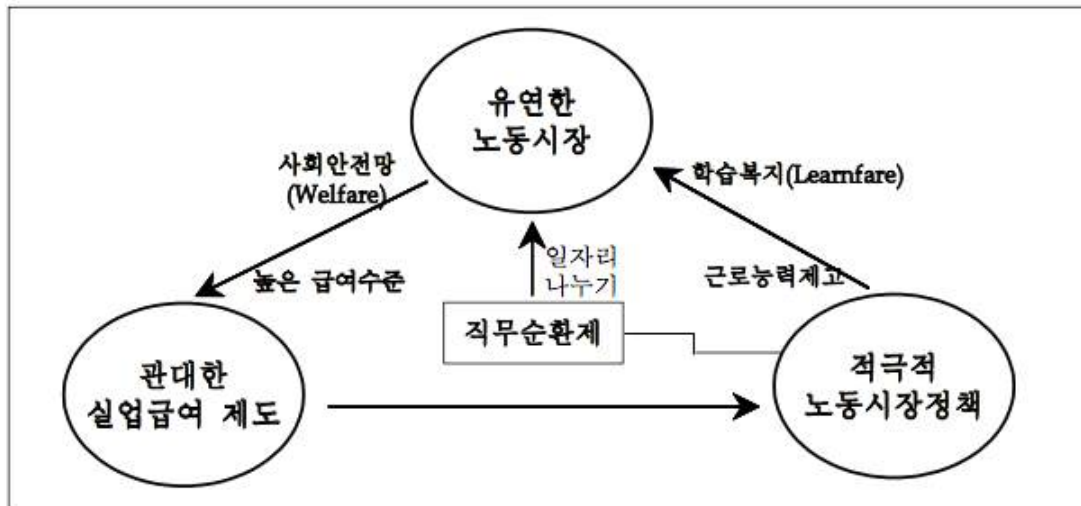
8) 문재인, 2017년 4월 11일

9) 또한, 각 지역 노동회의소는 노동운동 내 인사를 적극 기용할 공산이 높다.

눈을 씻고 보아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잘해보자’ 대화를 제안하면서 뒤로는 노동운동의 팔목을 비트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 정권은 그렇게 노동운동을 포위하고자 함.

4)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구축

- 현재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으며 문재인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은 이용섭은 4월 6일 경제4단체와의 회담에서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재취업기회” 3가지를 갖추겠다고 밝혔음. 이는 사실상 노무현¹⁰⁾ 정부 이래 한국 노동력 시장정책의 기초를 관통해온 ‘유연안정성’,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개념을 재론한 것.
- 곧,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한편 교육훈련·실업급여 등 미미한 사회안전망 개선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것. 이는 역대 정권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이중 노동시장론에 근거해 고용위기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씌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이른바 황금삼각형,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

순위	국가	2014년	2013년
1	콜롬비아	47.7	48.5
2	한국	30.8	31.8
3	칠레	-	29.7
4	코스타리카	27.9	25.8
5	터키	27.5	25.6
6	덴마크	21.9	21.2
7	멕시코	21.4	21.5
...
35	슬로베니아	9.3	11.2

10)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것은 노무현 정부다.

-	OECD 평균	17.5	17.8
---	---------	------	------

근속 1년 이하 노동자 비율 국제비교

출처: 「OECD 2015 고용전망」, 단위: %. (일본, 브라질, 뉴질랜드, 이스라엘은 2013~2014 미집계)

- 유연안정성 개념의 문제는 첫째, 이는 노동력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생산투입요소로만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 둘째, 유연안정성 개념의 등장 자체가 사민주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항 결과. 셋째, 굴이 화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한국에 이식하는 순간 전면적 노동유연화일 수밖에 없음.¹¹⁾ 넷째, 현재 자본가들 역시 이 합의를 원할 정도로 자본을 위한 정책.

“비정규직도 정규직 못지않은 당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정규직에 대한 각종 보호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와 교육훈련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¹²⁾

- 새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이식하며 포섭과 배제 전략을 구사할 것. 이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가 한 축에서는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에 대해 허구적 포섭전략을 동원할 것임을 말함.¹³⁾

4. 실천의 방향

1) 재벌체제청산 투쟁 - 생산통제의 단초 형성

- 새 정부의 시장주의적 재벌대책은 대중에게 주가상승 이익 등 지대적 이익을 부여할 공산이 높음.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도 마찬가지였음. 자사주 소각-배당확대 등의 기조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 팽창을 불러올 것이며, 앞서 밝혔듯 연기금의 시장참여 확대는 그 핵심 축.

- 재벌체제청산의 노동자 민중적 방향에 대한 제기가 필요함. 국정농단 사태의 실천적 해결은 결국 아래로부터의 자본통제 문제. 이는 모든 재벌총수 구속처벌에서부터 범죄수익 환수, 연기금 통제의 바른 방향에 대한 대중적 슬로건 제기까지를 포괄함. 최저임금1만원이 표상하는 분배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생산 통제의 문제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해야 함.

2) 조직 노동은 미조직 노동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 정권이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다며 내놓은 노동회의소가 아니라 산별교섭법제화와 노동3권 보장, 노동악법철폐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길임을 실천으로 미조직 대중에게 증명해야 함. 당장 노동부가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특수고용노동자만해도 300만에 달함.

- 물론 87년 이후 조직노동자 운동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자발적 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에 가까움. 그러나 노조할 권리, 헌법권리인 노동3권을 가로막는 노동악법 철폐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요구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미조직 대중을 조직

11) 덴마크 노동조합 조직률은 70%에 달한다.

12) 대한상공회의소,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 2017년 3월 23일

13) 대선 시기 문재인 공동 선대본부장 전운철이 밝은 ‘민간에서는 악성노조로 인해 고용창출이 힘들다’는 발언, 양향자의 ‘귀족노조’ 발언 역시 이와 상통한다.

하는 소중한 토양일 될 것. 일터, 공단, 지역에서 이 실천에 나서야.

3) 대중정치운동 활성화: 대중조직-정치조직 관계재정립 필요

- 미조직 대중과 만나야할 이때, 기아차 사태는 그 자체로 충격. 문제는 이를 혁신할 동력을 현재 노동조합 운동, 현장조직운동 만으로는 찾기가 힘들다는 것. 현장에 대중적 정치운동을 활성화해야 함.
- 정치운동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민주노총 역시 단위사업장 수준까지 정치위원회 활성화, 1인 1정당 가입운동, 각급 사안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배타적 지지방침 파산 이후 정치운동과의 관계재정립을 시도해야.

4) 사회적 합의주의와의 투쟁

- 노동운동 내 일부는 국가-자본-산별노조의 생산협약을 강조.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제기하는 노동정책의 노측 하위 파트너로서 조응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즉,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전제 하에, 정권과 이들이 공유하는 노선의 유사성은 집권당과 공동정부 구성, 혹은 아예 정권의 적극적 지지자로서 투항하는 이념적 근거를 구성하는 것.¹⁴⁾
- 문재인이 밝힌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법제화' 역시 마찬가지. 얼핏 좋아 보이도 하나, 법제도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주)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다른 기업 노동자라는 점에서, 파견법 철폐 없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
- 파견법 철폐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해결을 우회하는 요구로서 사회연대전략을 주장. 이것이 정권의 노사정 대화기구 구축 행보와 맞아떨어질 공산은 매우 높음. 새 정부는 민주노동운동 참식에 맞서야 함.

14) 어떤 형태가 되었건 중앙-지방에 걸쳐 연립정부 구성의 가능성은 높다. 이는 노동운동에 치명적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대응 방향(2016. 6. 13.)

노동전선

1. 19대 대선 결과 약평

1) 정권 교체

- 이번 19대 대선 결과는, 2016년 4.13 총선에 이어, 지난 9년여에 걸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시민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해 대중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치적 심판을 가한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예기치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에 따른 촛불집회가 낳은 정치적 효과이기도 하다. 여기서 촛불집회가 낳은 정치적 효과에서 주목할 점의 하나는, 지난 1987년 이후 한국사회 제도(주류)정치에서 선거 때마다 구도를 이루었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와 지역 구도가 각각 약화/완화되고, 향후 선거 구도가 보수-중도-진보 사이의 이념과 세력 구도와 함께 세대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이다.

- 이는 한국의 정치지형이 미국, 일본과 같은 거대 보수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 것을 지연/제어하고 유럽과 같은 계급, 계층별 이해를 좀 더 반영하는 다당제 구도(지형)가 형성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그동안 한국사회 또는 한국정치를 짓눌러왔던 남북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경직된 상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는 겉으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며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2) 촛불집회, 퇴진행동의 성과 및 한계

- 이번 19대 대선은 촛불집회가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과 집권당이 예상 외로 패배했지만 촛불집회가 아니었다면 19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웠다.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양강 구도가 유지된 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여소야대 정국 아래에서 한국사회, 한국정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가능성이 아니라 기존 구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인바, 촛불집회가 이를 제어/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의미는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다.

- 그러나 문제는 딱 거기까지에서 머무르고 말았다는 데에 있다. 촛불은 스스로를 정치화하지 못했고, 기존 정당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려 하였다. 하지만 기존 정당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요구들을 체제 내로 수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결과가 위와 같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객관적으로

촛불을 담아낼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부재했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나마 그를 가능케 할 수 있었던 퇴진행동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있다.

3) 변혁적 부위, 민주노총의 성과와 한계

-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을 지향하는 변혁적 부위는 촛불집회에 그 누구 못지않게 참여하면서 촛불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않고 스스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노력하였고 가변이 볼 수 없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거대하고 폭발적인 대중의 직접적인 저항 행동의 분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다 변혁적으로 보다 대중적으로 전진하게 함에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변혁적 부위는 대중이 직접적 행동으로 나서게 된 이유(신자유주의적 지배의 강화와 모순의 증대)와 그 기본적 해결 방향(자본주의 체제의 분쇄)을 모르지 않았으나 그것을 당면의 투쟁에 녹여내어, 구체화하고 대중을 추동하는 데에는 역부족을 드러내었다. 이에 대중들이 요구한 것은 객관적으로 제도권 정치로는 풀어낼 수 없었던 것들이었지만, 즉 촛불은 객관적으로는 제도권 정치에 친화적일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제도권 정치 내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저항은 불씨를 안은 채 다시 잠재화된 상태일 뿐, 지속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또 다른 대중적 저항을 키워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이 변혁적 부위에 던지는 과제도 그만큼 뚜렷한 것이다.

-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퇴진을 이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자신이 가진 힘을 대선공간에서 두 명의 진보후보에 대한 지원,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독자적인 투쟁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

2. 문재인 정권과 노동정책

1)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전망

- 지난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좌파 정권’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한국지형에서의 애기일 뿐, 세계적 맥락에서 보면 이들은 서구 사민당보다 한참 오른쪽에 있다. 한국에서 서구 사민당에 가까운 정당은 그나마 ‘진보정당’ 정도이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제도화, 전면화, 본격화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 폐해를 일부 보완/보충하려 할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더 이상 진전될 경우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중의 반발과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기존의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포함한 한국사회가 당면한 각종 모순이 더 심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책 일변도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입안/집행하고자 하는 것과 객관적으로는 그것들이 실천되거나 지속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세

계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압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재벌(자본)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협치’는 자본과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 내지 굴복으로, ‘통합’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과 탄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당분간 국내적으로는 정치개혁, 즉 이른바 ‘적폐청산’을 앞세워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노동자·민중의 반발과 저항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당면한 ‘핵’·미사일 문제,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매개로 남북,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남북문제는, 당대표 시절 발표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후보 시절의 ‘개성공단 확대’ 공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그러나 국내, 대외 상황 모두 무엇 하나 쉽게 풀일 일은 없다. 오히려 과거 정권들이 맞닥뜨렸던 상황보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악화되어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게 되었던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 등 정세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보였던 우경적 행보에서 잘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권이 자본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정권을 운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아니 문재인 정권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제국주의)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힘 관계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또한 과거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 결과적으로 머지않아 문재인 정권은 위(자본 및 기득권 세력)와 아래(노동자·민중) 모두로부터의 압력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2)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 문재인 정권이 주창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고용-복지’ 정책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 정책이고, 최상의 복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 즉 고용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인천 공항 비정규 노동자 1만 명 정규직화(자회사 입사를 통한 정규직화-중규직)를 선언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행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회의소 구축 및 노사정위 재가동을 통한 노사협의 기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자회사 전환 등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청 비정규직에서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고용과 임금의 차별, 원청 사용자성 및 단결권 부정 등 기존 비정규직 제도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이나 지역일자리 공약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보이듯이, 노사합의에 의한 저임금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사정 협약의 흐름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의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은 기존 비정규 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부분적 개선 조치를 통한 저임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개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담론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구축, 노사정 협의기구 재가동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포섭과 배제를 가할 가능성이 강하다. 이미, 양대 노총을 상대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강하게 강제하면서 민주노총 등의 핵심 요구인 노동3권 보장, 파견법 폐지, 특수 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탄압 근절 등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대응 방향

1) 민주노총의 대응 흐름

－ 6.30 사회적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최근 파업의 성격과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놓고 내부적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5.24 중집, 5.31 중집, 6.8 중집). 6.30 파업의 성격을 최저임금 등 첨예한 쟁점이 걸려 있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파업'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여야 한다는 의미 부여보다는, 실질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주요 산별 단위(금속, 공공 등등)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했고, 6.8 중집 결정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전까지 노정 교섭(협의)의 정례화를 확인한다는 조건하에 참여를 결정했다.

－ 위의 두 가지 쟁점은 정부에 대한 기본적 태도와 함께 당장의 대정부 투쟁을 가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노정 교섭과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설정한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참여는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노동자들의 투쟁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30명의 위원 중 관계 부처 장관 11명과 국책연구기관장 3명, 수석비서관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 구성으로 볼 때, '사회적 합의 기구'라기보다 '관료기구', '정부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해서 민주노총이 발휘할 수 있는 협상력은 애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다.

2) 변혁적 부위, 민주노총의 정치적/조직적 독립성/독자성 강화

－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촛불에 정치적 빛을 지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촛불(그 속에

노동자·민중의 반발과 저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촛불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전면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문재인 정권에 정책을 일방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변혁적 부위, 민주노총이 정치적, 조직적으로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노동자·민중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이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견제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기구에 원칙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투쟁을 통한 대정부 직접 교섭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과 항상적 기구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전자의 경우는 투쟁과 교섭 여하에 따라 주체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설령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에 따른 결정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들어가서 활동할 경우 노동자 투쟁을 들러리 세우는, 즉 수동화시킬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지금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며, 이런 정세에서는 밖에서 투쟁하는 것이 기본이다. 설령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시기가 온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현안 투쟁 강화와 함께,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 조직화

- 변혁적 부위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과 함께 현안 투쟁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조직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듯 대중적 차원에서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촛불집회가 충분히 정치화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거기에 참여, 결합한 대중의 책임이 아니며,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만도 아니다. 단번에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시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 변혁적 부위와 민주노총은 우선 민주노총 6월 투쟁 조직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총 6월 투쟁을 문재인 정권과의 일차 정립 과정일 수밖에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대상임을 분명히 확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그럴 경우 다시 보수 세력이 준동할 것을 우려하여,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는 현 정세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혀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것이다.

4) 6말 7초 노동자 정치파업의 가치를 분명히 내걸어야

- 특히, 최저임금 1만원으로 집약된 6말 7초 총파업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구조조정 저지,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등 그동안의 노동 이슈들을 집약하는 투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이후 등장한 신정권에 대한 대중적 기대가 높은 것은 그동안의 불만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대가 높다는 것은 조직하기에 따라서는 노동자의 불만이 대거 솟구칠 수도 있는 정세 지형인 것이다.

- 신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진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주노총 등 조직 노동자에 대한 고립과 배제 전략을 취해 올 것이다. 대선 전 문재인

지지를 공개 선언한 세력 등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노조 진영 내 개량주의 세력의 준동이 노골화될 것이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맞선 노동자 정치파업, 즉, 반노동 정책의 전면적 폐기를 중심으로 6말 7초 정치파업의 상을 분명한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5) 6말 7초 총파업과 이후 현장 조직화 사업

－ 하지만 6말 7초 총파업의 동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5.30 중집은, 6.28부터 7.8까지 5대 요구(△박근혜적폐청산 △최저임금1만원쟁취·비정규직철폐·저임금타파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개혁·사회공공성강화 △노조할권리쟁취·노동법전면개정)를 걸고 하루 이상 파상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기간 중 6.30은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최저임금1만원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권리쟁취 등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며, 그 외 사업장은 파업, 총회, 연가투쟁, 확대간부 이상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준비되고 있던 ‘사회적 총파업’은 사실상 비정규 단위의 파업으로 축소된 것이다.

－ 6.30 사회적 총파업은 최저임금 1만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한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한편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탄압 분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를 걸고, 조직 노동자들이 공세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자 계획했던 파업이기도 하였다.

－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이번 총파업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전자의 의미를 살려낼 필요가 있겠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정권이 말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허상을 ‘폭로’해 내고, 미조직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이슈를 정권에게 선점당한 상황에서, 정권을 ‘폭로’해 내는 사회적 선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권이 말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1만원 인상 등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전해 나가면서, 정권의 본질을 ‘폭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6말 7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5대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계속적으로 교육하면서, 현장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정 교섭의 구체적 내용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싸울지 조합원들에게 끊임없이 선전하고 교육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의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말 7초 총파업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구체적 요구들을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내면서, 특히 양심수 석방 및 수배 해제,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 공공기관 해고자 전면 복직,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 등 당장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정권을 압박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듯, 지금의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어느 때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 이상의 내용들로 노동의 의제들을 사회화시켜내고, 현장을 끊임없이 조직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6) 사드투쟁, 문재인 정권의 시험대

- 대선 기간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 배치 전면 철회를 분명하게 촉구하여야 한다. 대선을 전후해서 핵 문제 및 동북아 평화의 쟁점은 사드 배치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평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안이다.

- 노동자들의 6말 7초 파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말하고 있듯이 '적폐청산(사드)'에 돌입할 것을 대규모의 행동(범국민 대회 등)을 통해 촉구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 뜨거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못할 시, 지난 정권과의 한미 합의 사안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신정권이 대략의 청사진을 내놓게 될 6월 현재, 이 문제를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노동자운동의 과제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1. 문재인 정부 등장 배경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은 촛불투쟁의 성과를 도둑질하면서 등장했다. 자본가 정부의 얼굴마담을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본가 정부 자체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전투적 정치투쟁을 조직해나가는 운동세력의 영향력이 미미했다.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서 자본가정부에 맞서 투쟁을 이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촛불투쟁은 자본가당들의 우리인 국회와 부르주아 법률가들의 기구인 특검, 자본주의 국가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구호는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대안, 자본주의 체제 바깥의 대안을 상실한 촛불 대중을 파고들었다. 체제 안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를 새로운 정부로 시급히 대체하고, 대중의 투쟁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가두어 통제해야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했던 자본가계급은 더민주당에서 적절한 해법을 발견했다.

문재인의 승리는 노동자대중 생존의 절박성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세력이 파고든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으로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고들었다.

촛불시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도 노동자대중은 더민주당 문재인의 약속에 의심을 품으면서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과 같은 진정한 대안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민주당의 약속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문재인은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자본가계급에게 선택됐고, 중간계급 대중의 지지를 끌어냈다. 그리고 노동자대중의 상당수를 자신의 주위에 모을 수 있었기에 승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독자성과 단결, 투쟁을 무너뜨리는데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잠시 동안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듯한 포즈를 취하겠지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과 투쟁을 깨뜨리기 위해 그동안 해온 모든 거짓말은 결국 폭로될 것이다. 작년 11월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여리박빙(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과 같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고용시장의 활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28.7%에서 2016년 3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고, 공공부문 부채는 이미 오래 전에 1,000조를 돌파했다. 경제를 살리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고 자본가국가인 이상 다른 미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2. 문재인정부의 개량없는 개량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 탈권위적인 행보와 개혁조치, 일자리창출, 정규직화 등을 제시하며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 바야흐로 개량의 시대라 할 만하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개량은 지배계급이 충분히 소화가능한 개량이다. 이러한 개량은 체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 탈권위주의와 소통, 3권 분립, 검찰개혁, 국정교과서 폐지 등 부르주아(자본가) 민주주의의 확대가 그것이다.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87년 이후 점차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치다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잠시 제 궤도에서 이탈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거는 적폐청산 구호는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변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성되면 될수록, 사회적 화두는 근본화된다. 완전한 3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노동자계급에 적대적인 공격을 하고 노동자대중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회는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행정부, 검찰, 사법부는 이 노동악법을 집행해 파업에 경찰을 투입하고 파업노동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언론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언론은 재벌들과 언론기업들이 독점하고, 자본가계급의 논리와 사상을 전파한다. 돈 없는 노동자들은 방송국 하나 가질 수 없다. 공정한 기회와 취업의 자유? 그러나 기계와 작업장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제시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먹고살 길이 없다.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면 할수록, 이 체제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독재 체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로부터 개량을 넘어선 혁명이란 화두가 억압받는 피지배계급 앞에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노동자계급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와 노동자권력으로 대체하는 혁명적 화두가 노동자계급 앞에 정면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대중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1700만 촛불이 타올랐던 것은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실업, 저임금, 비정규직화, 불안정한 미래, 위험하고 고된 노동, 불평등의 확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전위는 비정규직 제도와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세금제도를 활용해 불평등의 수위를 조절하려 한다. 그들의 소원대로 이러한 개량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당분간 자본주의 체제는 안전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빠르게 상승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다. 충분한 일자리, 임금수준 향상을 감내하더라도, 자본가들은 충분한 이윤율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하락국면에 접어들면서는 둘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아무리 뛰어난 자본가계급 대표자들일지라도, 공황과 만성불황, 좁아지는 시장, 격화되는 경쟁을 거스를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은 자본가계급의 대표자로서,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체제 안정화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정도의 개량은 자본가계급의 변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결과 ‘개량 없는 개량’이 탄생한다. 자본주의 위기가 격화되면, 심지어 ‘사소한 개량’마저 거둬들이고 노골적으로 착취를 강화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개량은 ‘개량 없는 개량’에 불과하며, 그것이 증명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협력업체 노동자 : 제가 경력 10년 좀 넘는데 4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S6 급은 2,800만 원입니다. 연봉 천만 원 깎고 B급으로 채용하는 게 가족입니까?” (JTBC, 인천공항 ‘1만 명 정규직 전환’ 시작부터…또 다른 차별?, 2017.05.15)

그러나 구명보트가 없다면, 썩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운동이 다수 노동자대중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다른 탈출구가 없는 압도적 다수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본가 정부의 개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지금 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를 비롯한 가난한 노동자대중을 결집해 정규직화,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진정으로 사활적인 노동자 권리들을 쟁취하는 힘찬 전망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가 정부의 허울뿐인 개량이 파고들 빈틈을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개량일지라도, 자본가 정부의 주도권과 영향력 확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자본가계급은 광범위한 가난한 노동자들을 조직노동자운동과 떼어내고,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당들의 지지 기반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투쟁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런 주도권을 바탕으로 조직노동자운동을 포위해 고립시키면서 붕괴시키는 대담한 계획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개량 없는 개량’인데도,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능력과 독자성을 지워버림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포섭-분열전략 ; 노사정 대타협

문재인은 6.10항쟁 기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개량없는 개량’으로 가난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기반으로 삼아 조직노동자운동을 포위, 고립시키는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출발은 일자리위원회다. 일자리위원회는 그 자체로 노사정위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에게 계급적 단결과 투쟁이라는 전망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적 파트너가 되기를 강요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의제를 전면에 걸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 지도자들의 환상을 더욱 부추긴다. 그동안의 노사정위가 정부와 자본가단체가 한통속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던 것과 다른 그만큼 위험은 더욱 크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섭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성장과 분배’ 즉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그가 이상적 모델로 추앙하는 독일 하르츠 모델은 독일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확산한 노동개악 모델이자, 정규직 노동자에게 대대적인 양보를 강요하면서 노동자운동을 분열시킨 모델이다. 일자리위원회를 배후에서 이끄는 실세인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도 “대기업 노동자임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분배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려 한다. 또한 이런 분열정책을 노조 지도자들의 협조와 동의를 통해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면서, 소위 고임금 정규직 노동조합을 전면 공격할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개량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선물하면서, “봐라!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니 당신들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느냐”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조직노동자 탓으로 전가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가령 공공부문을 보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총액을 ‘총액인건비’로 묶어 놓았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혹은 자회사 정규직화, 나아가서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 총액인건비 증액없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떼서 나눠줄 수밖에 없다. 이에 저항하면 철밥통, 귀족노조 이기주의라는 공격에 내몰린다.

4. 노동자운동의 과제

우선 ‘개량 없는 개량’은 엄청난 모순과 위험 속에서 작동한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탈출구를 학수고대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일 것이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정규직화와 일자리를 향한 열망을 토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철도 자회사 KN의 조직확대, SK브로드밴드 자회사 발표 이후의 조직화 확대,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 등은 아직은 미미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건은 비정규직과 가난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량 없는 개량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노동자운동이 새롭고 젊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를 수혈받아 노동자계급의 바다로 진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계획은 파탄날 것이며, 그들이 위험스럽게 꺼낸 개량은 노동자운동이 아니라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을 겨누는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노동자운동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직 비정규, 미조직 대중들은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 자본가계급이 위태로운 개량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할 만큼 이들의 고통과 분노는 거대하지만, 이것을 노동자운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노동자운동의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630 파업과 같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대담한 투쟁에 돌입해, 이 거대한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가 던져주는 떡고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려하기 때문에 정부 개량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체계를 활용하든, 다른 형식을 활용하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고무하고, 나아가서 정규직 노조의 문호를 그들에게 개방하는 노동자 총단결 전략을 자신의 노동조합에 구현하려 분투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활동가들은 이제 자신의 활동 범위를 현장과 지역의 전체 노동자로 대담하게 확장해야 하며,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자신의 사활적 당면과제로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대중에 대한 계급적 책임성을 발휘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규직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자본가계급이 노리는 사회적 고립을 타개하면서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바깥에서, 노사정위 바깥에서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의 정책에 놀아나서 노동자계급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계급단결투쟁으로 배부른 자본가들의 이윤을 공격해 그것을 되찾아와 노동자계급 전체의 생존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성장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가능하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이냐, 노동자계급 전체의 생존이냐?” 이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 발제문

2017.6.13

정진우(노동당 노동위원장)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은 6월 8일, 2017년 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참여 취지를 밝혔다.

(『노동과세계』2017.6.8)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16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기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직접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며 대선 으뜸 공약인 ‘일자리 대통령’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부서간 정책을 조정(코디네이터)하는 수준을 넘어 새 정부의 정책 ‘컨트롤 타워’(『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8개 부서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수석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통령이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추진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행보를 내다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은 새 정부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입장과 과제를 설정하는 1차적인 쟁점이기도 하다. 근로자를 대표하여 민주노총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일자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과거 노사정위원회처럼 정부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의제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의결을 밀어 붙이거나, “노동존중 사회” 대선공약과 달리 친기업, 친재벌로 경도돼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하는 노사정위 재판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한다”는 취지로 논란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

(『노동과세계』2017.6.8)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일자리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현 정부의 노선을 집행하는 정부 핵심 관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계 위촉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도(30분의 1 또는 2), 노동계의 입장에서 일자리위원회를 '노 VS 정' 또는 '노사정'의 대등한 교섭 테이블로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주노총 중집은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한 “명료한 입장과 실행계획 제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재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은 무엇인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논란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아야 할 것은 (편파적인)구성과 (일방적)운영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는 새 정부 노동전략의 방향과 실체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박근혜 정부)을 포기하고, 글자 그대로 ‘노동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가? 일자리위원회 참여 전략에 비중을 둘 것인가, 또는 노정교섭 정례화를 기본 교섭의 통로로 확보할 것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노동운동 진영은 자신의 교섭(또는 투쟁) 상대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추진할 핵심 과제는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대선일 작성, 116쪽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성장(기업성장·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격차해소(국민 모두의 일자리 성장·고용노동 적폐청산 방안) △국정관리(일자리상황판 기획 및 정책 점검·평가)로 구성된다.(『매일노동뉴스』2017.5.15) 이 보고서는 대선기간에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대선 공약에서 일부 과제를 삭제, 수정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노동전략의 나침반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당(정책위)은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텍스트로 하여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 4편(노동편)’을 작성하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계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 볼 부분은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으로 법정최장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분야 81만개 일자리 창출 △근로행정감독 강화 △임금 격차 해소 △불법파견 정규직 고용 의제 △실업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비단 일자리 정책분야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정책과 주요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장 먼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 기본 방식이고, 임금 개선과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직무를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른 생산성을 비교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명분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직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적용해야 할 대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사회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임금의 대폭 상승 없이는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 모두 정책 효과 기대 어려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도 정책 수위가 이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현재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최장 노동시간으로 한다는 정책은 너무나 불충분하다. 이미 각국에서는 주당 35시간을 넘어 30시간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실험하거나 논의하는 단계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거세질 자동화·정보화 추세는 주당 52시간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잠식할 것이 분명하다. 주당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상한제 정도를 실시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일시에 도입하기 어렵다면 임기내 순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대로 시행해도 여전히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게 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발생할게 될 노동소득의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수당 도입, 공공서비스 확충, 나아가서 기본소득 등 노동소득 감소를 막을 보조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1만원 시점을 2020년 내에 달성한다는 공약은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2020년으로 다시 수정이 이뤄졌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자리위원회가 2022년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던 인식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여전히 의심케 한다.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진영의 주장은 오히려 내수 기반을 확장시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영업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수 기반의 확충에 덧붙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관계를 재조정할 별도의 정책으로 보완되면 악영향을 걱정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결국 ‘언제’ 시행하느냐가 정책적 진보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1차 분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정책이다. 2020년으로 미룬다면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다.

불안정 노동체제의 법률적 기초의 폐기 없이 비정규직 축소 한계 분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다.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 근로감독청 설치하는 그동안 ‘노동악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던 노동행정의 방향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각종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노동행정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비율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기금으로 정규직 전환기업에 인센티브와 사회보험료 확대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설계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안정 노동체제는 기간제, 파견제 등 IMF 구제금융 이후 도입된 비정규 악법에 기초하고 있다. 파견제를 도입한 김대중 정부는 파견법이 선진 각국이 취하는 노동 유연성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강변했지만, 결과는 사내하청과 같은 불법 파견의 양산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를 도입한 참여정부는 기간제 시한인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단위 단기 계약의 갱신을 통해 영원한 비정규직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큰 원칙이 섰다면 비정규 악법의 법률적 기초를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행정지침 수준의 개정으로는 검찰, 법원 등 친자본 일변도 사법 작용의 관행에 맞서 불안정 노동체제를 종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행정지침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불법파견 판정시 정규직 고용 의제 정책은 분명히 진일보했지만 불법파견의 판정에서부터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 사법의 영역은 사용자 편향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파견법 자체를 폐기하고, 사내하청 등 도급 형식을 취한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간제법도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기본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인데, 일자리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공공 부문에 국한된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한계는 크다. 일단 상시·지속 업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법원의 판단에서도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노동당은 기간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3개월 주당 평균 35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상시지속 업무의 기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법정노동시간(주 35시간)이라는 분명한 양적 기준으로 그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그 수단들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현재로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평가하기 어렵다.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권 제약 완화, 필수유지업무와 공익사업 범위 축소, 손배·가압류 제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은 노동3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음에 비해 정책 방향만 열거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없다. 매 정권마다 이런 사안들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았다. 정리해고제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혁, 산별협약 효력확대 조항 강화 등도 역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언급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축소와 네덜란드 모델은 정책 기조의 충돌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언론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추진하려다 실패한 ‘네덜란드 모델’을 언급했다. 네덜란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시간유연성 제고와 임금 동결을 노동이 수용하는 대신 경영 참여를 보장받고,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을 전일제와 시간제로 분할시킨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한다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

무엇보다도 대타협이란 협상 당사자의 일정한 힘의 균형을 전제하는데,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조의 제도적 대항력은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을 논하기에

무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한국에는 노동자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도 갖춰지지 않았다. 노동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진보정당의 존재감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타협이 아니라 노동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역대 모든 노사정 대타협 시도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노사정 대타협의 전제조건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들이 노동의 교섭력 강화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은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에 답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돌아오면, 결국 다시 일자리위원회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이자, 노동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전략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일자리위원회는 기구이자 방향이고, 나아가 그 자체로 전략이다. <1>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국가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채택한 가장 위력적인 노동전략이다.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전면에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를 보도하는 주요 언론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사회적 대타협’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과 무엇이 다른가? 위원장이 장관급인 ‘노사정위원회’보다 격이 높은 것?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구에 노사단체만이 아니라 비정규직·하청노동자·청년·여성을 포괄하는 계층별·산업별 노동자 대표,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 각급 경영계 대표들을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과 정부 책임자들이 하나의 합의 기구를 구성하고, 도출된 합의에 따라 국정과제를 집행해나간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 핵심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5일, 새 정부 일자리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노동시장 안정화’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부문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 대부분은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화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원-원이 안 된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원-원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게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다”며 “양보와 타협으로 진정한 사회적 협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문제까지 녹여내자”고 주문한다.

<2>사회적 합의 시스템의 목적은 노동시장 안정화이고,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에 <3>다양한 이해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타협해야 진정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메인테이블을 차리는 이유는 계급대표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현장의 자주적 노동조합이 계급대표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 시작한 지도 십여 년이 흘렀다. 초기에는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외적 요인이 제기되었다. 이제는 격차가 심해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계급대표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저들이 노동단체 대표와 계층별·산업별 노동자 대표(비정규직·하청노동자·청년·여성)를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의도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저들 나름의 절박한 현실 판단이다. 노사정 위원회의 뼈아픈 실패는 노동운동만의 것이 아니다. 기존 노사정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대표성(당사자성)의 확장이다. “지금의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는 ‘기업 대 노동’뿐 아니라, ‘대기업 대 중소기업’, ‘대기업 노조 대 중소기업 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거와 같은 ‘일괄 합의’ 방식의 타협이 어려워졌다”는(『한겨레』 2017.6.11.)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기구에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을 메인테이블로 해달라고 정부에 읍소해야 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노정교섭 정례화를 일자리위원회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주장은 어떤 실효성을 갖는 것일까? “큰 틀의 사회적 합의기구 기능은 일자리위원회가 맡고 노사정위는 노사 현안에 집중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될 것”(홍영표 의원)이라는 예측은 정치인들의 예의 있는 화법에 가깝다. 노사정위 또는 노정교섭의 틀이 운영되더라도 그것은 정무적인 대화 라인을 유지할 필요에 따르는 수준이 될 것이다. 메인테이블은 ‘노정’(또는 노사정)이 마주 보는 겸상이 아니고, ‘만인’(다양한 주체들)이 둘러앉은 원탁이다.

계급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항시적인 과제이다. 현 시기 긴급한 문제는 저들의 핵심 노동전략이 노동운동의 계급대표성 해체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이 1998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은 여기에 있다. 당면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조직과의 타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이해관계의 노동자, 국민들과 직접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표로 나서 이러한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나름의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출발점도 계급대표성이다

김대중 정부가 경총과 양대 노총을 참여시켜 시작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전교조,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나마 노사정 합의의 성과물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가 되었다.

2017년, 노동운동은 또 어떤 것을 주고,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가?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시급히 해쳐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다시 또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무기가 될 수 없다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노동운동의 가장 오래된 구호의 하나인 “노조할 권리”는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시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청년·여성을 포괄하는 계층별·산업별 노동자 대표는 저들이 초청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비정규직·하청노동자·청년·여성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저들의 해체 전략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는 그래서 다시 또 노동조합이다.

정리해고, 파견노동의 암흑시대와 특정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리해고·간접고용·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노조할 권리’를 진척시켜야 한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적인 노조를 파괴할 수 없도록 사회적·법적 통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다.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의 건설이다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우리에게 있다. 비정규직 사회연대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꾸어 온 것은 무엇인가? 절박한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조직을 만들고, 투쟁을 확대해나갔다. 비참한 현실을 딛고, 싸우고 부딪히며 장벽을 넘어온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계속되는 오늘, 민주노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전히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은 투쟁하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을 혁신한다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 된다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 분리사태에서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로 관통하는 절박한 키워드는 민주노총의 혁신이다.

우리를 혁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는 저들의 언어다. 노동운동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을 우리의 언어로 뒤집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은 노동시장의 갈등을 무마시키는 그들끼리의 리그

언어는 철저하게 계급적이다. 자회사·무기계약은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인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차별 없는 원청사용자 직접고용이 우리의 언어다. 노동시장의 갈등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안정’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니다. 절박한 것은 진짜로 뒤집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 민주노총은 진짜로 모든 노동자들의 조직이어야 한다.